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차 례

I. 개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예산안 개요	2
3. 세출예산안 명세	4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8
II. 검토의견	13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	1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3
나.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	13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1011-200)	2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21
나. 파견검사분 직책수행경비 감액 필요	21
3.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2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23
나. 『법제』 발간을 위한 원고료 예산 감액 필요	24
4. 법령정보제공(1031-300)	27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27
나. 입법체험행사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운용 필요	28
5. 법제정비(1032-301)	3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32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3

6.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39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39
나. 생성형 AI 플랫폼의 정확성 확보 필요	40
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예산의 증액 검토 필요	45
라.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의 필요성 검토 및 효과적인 운용 필요	49
7.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5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53
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진행 필요	54
8.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58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58
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여국 확대 필요	59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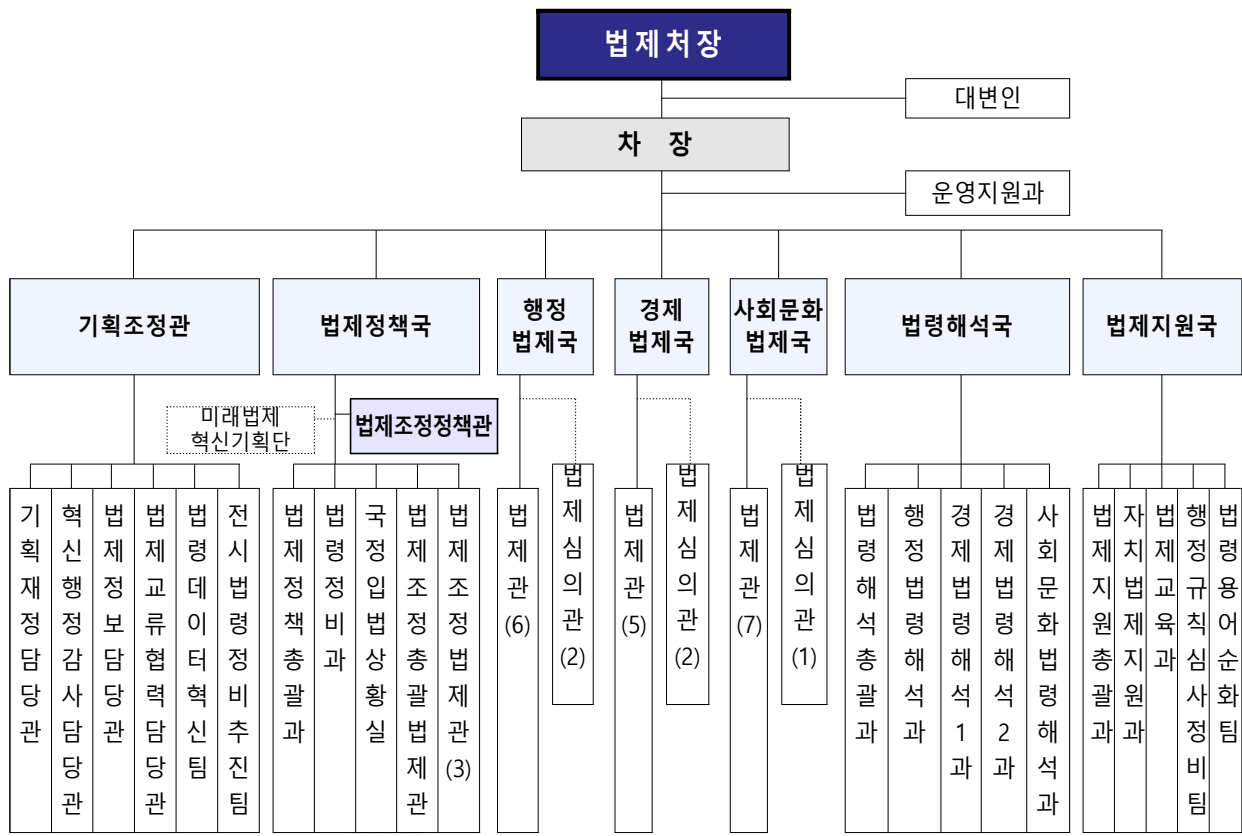
1. 최근 5년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2. 2026년도 주요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 2025년 10월 말 기준, 법제처는 1조정관, 6국, 1정책관, 5심의관, 22법제관, 17과(담당관), 4팀, 1기획단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소속기관은 없으며, 정원은 총 239명이며 현원은 총 233명임.

< 법제처 조직도 >



< 법제처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5. 10월 말 기준)

구 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별정직	일반직
정 원	239	1	－	－	238
현 원	233	1	－	－	232

자료: 법제처

2. 예산안 개요

가. 예산규모

- 내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603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300만원(31.9%)이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세출예산과의 증감 대비 >

(단위: 백만원)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 감	
		금액(B-A)	비 율(%)
45,733	60,336	14,603	31.9

자료: 법제처

나. 정부재정규모와의 비교

- 법제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03억 3,600만원은 정부예산 일반회계 총규모 507조 4,467억 5,200만원의 약 0.01%에 해당되어 2025년도와 비슷한 비율임.

< 정부재정규모와 법제처 예산 규모의 대비(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예산	법제처예산	비율(%)
2025년도 예산	473,659,421	45,733	0.01
2026년도 예산안	507,446,752	60,336	0.01
전년대비 증가율(%)	7.1	31.9	

자료: 법제처

다.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대비

- 법제처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2%(224억 8,500만원) 증액된 682억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대비 △11.6%(△78억 8,200만원)가 감액된 603억 3,6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2026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항별	요구액(A)	조정액(B)	증감		증감사유
			금액(B-A)	비율(%)	
인 건 비	25,444	24,948	△496	△1.9	○ 불용률 등 고려하여 일부 조정
기본경비	5,591	5,338	△253	△4.5	○ 일반수용비 등 일부 조정
사 업 비	37,183	30,050	△7,133	△19.2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등 예산 일부 조정 반영
합 계	68,218	60,336	△7,882	△11.6	

자료: 법제처

3. 세출예산안 명세

가. 경비별 명세

□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2025년도 대비 증감비율 및 전체 예산 대비 경비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는 249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가 증액(11억 6,8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41.3%를 차지함.
- 기본경비는 5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가 증액(1억 3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8.8%를 차지함.
- 사업비는 30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7%가 증액(133억 3,200만원)되어 전체 예산 중 49.8%를 차지함.

< 2026년도 세출예산안 경비별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액(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구성비 (%)
			금 액 (B-A)	비 율 (%)	
인 건 비	23,780	24,948	1,168	4.9	41.3
기본경비	5,235	5,338	103	2.0	8.8
사 업 비	16,718	30,050	13,332	79.7	49.8
합 계	45,733	60,336	14,603	31.9	100.0

자료: 법제처

나. 인건비 명세

- 인건비는 전년 대비 4.9% 증액된 249억 4,800만원이며, 동 경비로 편성된 사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 등임.
- 법제처는 인건비 집행추이 및 처우개선분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설명함.

< 2026년도 세출예산안 인건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금액(B-A)	비율
총 액	23,780	24,948	1,168	4.9
보수 등	23,599	24,756	1,157	4.9
연가보상비	181	192	11	6.0

자료: 법제처

다. 기본경비 명세

-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 증액된 53억 3,800만원이며, 법제처의 일반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지원 등임.

< 2026년도 세출예산안 기본경비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5,235	5,338	103	2.0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1,780	1,794	14	0.8
○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	3,455	3,544	89	2.6

자료: 법제처

라. 주요사업비 명세

-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79.7% 증액된 300억 5,000만원임.
- 내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액사업은 총 4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비가 전년대비 8.2%(1억 1,200만원) 증액된 14억 7,400만원,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비가 전년대비 155.0%(124억 7,100만원) 증액된 205억 1,700만원,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비가 전년대비 54.4%(9억 8,100만원) 증액된 27억 8,300만원,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비가 전년대비 77.0%(1억 8,700만원) 증액된 4억 3,000만원임.
- 감액사업은 총 5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법령정보제공’ 사업비가 전년대비 △7.5%(△1억 1,600만원) 감액된 14억 3,600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비가 전년대비 △3.9%(△6,600만원) 감액된 16억 1,600만원,
 - ‘법령심사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4.8%(△1,500만원) 감액된 2억 9,600만원,

- ‘법제정비’ 사업비가 전년대비 △3.3%(△3,900만원) 감액된 11억 4,500만원,
- ‘행정법제혁신’ 사업비가 전년대비 △37.7%(△1억 8,300만원) 감액된 3억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주요사업비 세부명세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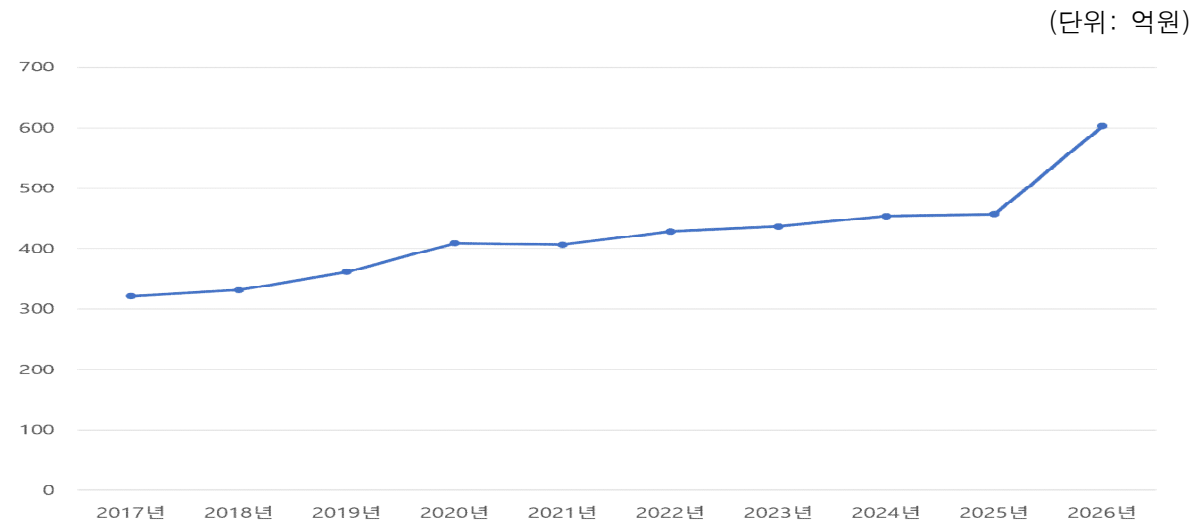
구 분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16,718	30,050	13,332	79.7
○ 법령정보제공	1,552	1,436	△116	△7.5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682	1,616	△66	△3.9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1,362	1,474	112	8.2
○ 법령심사지원	311	296	△15	△4.8
○ 법제정비	1,184	1,145	△39	△3.3
○ 행정법제 혁신	486	303	△183	△37.7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8,046	20,517	12,471	155.0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802	2,783	981	54.4
○ 외국법제기관교류	243	430	187	77.0
○ 법제정책연구개발	50	50	0	0

자료: 법제처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검토의견 요약

-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내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603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 증가 비율은 31.9%로서, 법제처의 최근 10년간 예산액 평균 증가율인 7.1%보다 높고,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8.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법제처 예산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액	322	332	362	409	407	429	437	454	457	603
증감액	9	10	29	47	△2	22	8	17	3	146
증가율	2.9	3.2	8.8	13.0	△0.3	5.4	1.8	3.9	0.7	31.9

자료: 법제처

□ 2026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법제처는 인건비 중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근거규정에 따라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직무급 선정 절차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중요직무 선정 사유 중 “중점 추진과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중요직무급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둘째,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중 4억 2,668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법제처 파견검사가 폐지되었으므로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파견검사분 직책수행경비 954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분기별 발간 학술지인 『법제』 발간을 위하여 8,22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 연평균 약 2,459만원(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원고료는 연간 원고 107편이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 심사료는 연간 27편이 투고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여 일관되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의 감액조정이

필요함.

- 넷째,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을 20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2024년 및 2025년의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한 입법체험활동 만족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마당, 참여심사 등은 96~97%의 높은 만족도수치를 보여주나, 법령퀴즈 골든벨의 경우 2025년 만족도 수치가 86%에 해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바,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입법체험활동의 경우에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법제처는 법제정비 사업 내 알기쉬운 법제구축 내역사업에서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4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 문장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실제 법령 정비 실적도 미흡하며, 정비안 자체의 내용도 경미한 수정에 불과하여 개정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장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3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국가기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AI 환각 현상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능형 법령검색(Lawbot) 사용자의 질의 입력 히스토리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법령검색을 위한 학습데이터셋 구축에 활용하는 한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의 개발시 법령 조문, 판례번호 등 인용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자가 곧바로 해당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아웃 고도화 예산 2억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버튼과 복잡한 메뉴 구성의 직관화, 반응형 웹 기술의 적용, 뒤로가기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구성 재설계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법제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할 필요성이 높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처가 관리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경우 향후 정부입법 통합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제공되므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이후의 개인정보 관리방안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법제처는 매년 약 4,300만원의 예산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의 단기해외연수를 살펴보면 출장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이 포함되거나 기존 실시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있으므로 단기해외연수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를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열째,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설립·운영 관련 경비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협의체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하여 협의체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II. 검토의견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인건비(1011-100)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를 편성·집행하기 위한 경비로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249억 4,8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1억 6,800만원(4.9%)이 증액되었음.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22,736	23,780	24,948	1,168	4.9
보수(110-01)	22,269	23,224	24,403	1,179	5.1
기타직보수(110-02)	336	375	354	△21	△5.6
연가보상비(110-05)	131	181	192	11	6.1

자료: 법제처

나.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중요직무급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정원의 24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임.¹⁾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

<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대상 및 직급별 지급액 >

구분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중요 직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00,000원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원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자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안에서 54명에게 각각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에 해당하는 중요직무급을 직급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총 1억 1,400만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편성하였음.

< 중요직무급 수당 편성내역 >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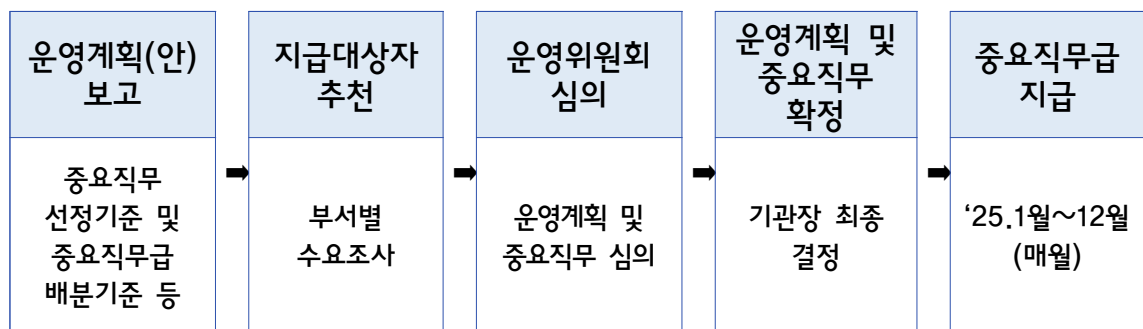
지급대상	산출근거	지급액
파.중요직무급		114,000
가)연봉제		106,800
1) 3급[기준정원]	200,000원*7명*12개월	16,800
2) 3급[기준정원](국가기관 파견)	200,000원*1명*12개월	2,400
3) 4급[기준정원]	200,000원*26명*12개월	62,400
4) 5급[기준정원]	150,000원*14명*12개월	25,200
나)월급제		7,200
1) 6급[기준정원]	100,000원*4명*12개월	4,800
2) 7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
3) 8급[기준정원]	100,000원*1명*12개월	1,200

자료: 법제처

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법제처는 부서별 지급대상자 추천과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제처장이 중요직무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중요직무급 운영절차도 >



자료: 법제처

- 법제처의 중요직무 선정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요직무급의 근거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는 중요직무급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그 세부사항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하고 있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중요직무급 수당 운영시 유의사항으로, 각 부처가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요직무급 수당 운영시 유의사항 >

10)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11 제3호 사목

나)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중략>

마) 운영시 유의사항

(1) 중요직무급 운영관련 서면 기록·관리

각 부처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자료: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 법제처는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중요직무 중 일부를 심의하기는 하나,²⁾ 중요직무의 선정 사유는 “중점(중점 추진과제 관련 직무)”, “격무”, “협업”의 3가지로 밝히고 있을 뿐이며, 선정 절차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면 자료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중요직무급 선정 절차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2) 법제처는 전년도 중요직무급 대상 직무와 ① 중점 추진과제 관련 직무, ② 격무·기피직무, ③ 협업직무 여부 및 국별 주요업무 추진 직무 등을 고려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서 1차로 선별하는 직무인 “우선선정 직무(2025년 기준 34개 직무)”와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최종 후보군 중 처장이 추천하는 직무인 “처장님 유보분(2025년 기준 5개 직무)”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국별 추천 직무 28개 중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나머지 17개 직무를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2025년 중요직무급 선정 직무(법제처) >

국	부서	선정 직무	선정 사유
직속부서 (12개)	처장실	비서관	격무
		수행비서관	격무
		비서	격무
	차장실	안전검토 비서관	격무
		안전검토 비서관	격무
		비서	격무
	운영지원과	과장	격무, 협업
		인사계장	격무, 협업
		서무계장	격무, 협업
		처 서무	격무, 협업
	대변인	대변인	격무, 협업
		부대변인	격무, 협업
기획조정관 (10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관	중점, 격무, 협업
		기획계장	중점, 격무, 협업
		결산 및 평가 총괄	중점, 격무, 협업
		국회 담당	중점, 격무, 협업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격무, 협업
		조직계장	격무, 협업
		정부혁신 담당	격무, 협업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	중점, 격무, 협업
		데이터정책 총괄 사무관	중점, 격무, 협업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외국기관 교류 담당	중점, 협업
법제정책국 (8개)	법제정책총괄과	과장	중점, 격무, 협업
		법령계장	중점, 격무, 협업
		입법예고 담당 주무관	격무, 협업
	법령정비과	과장	중점, 격무, 협업
		총괄 서기관	중점, 격무, 협업
	법제혁신지원과	과장	중점, 격무, 협업
		총괄 서기관	중점, 격무, 협업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	중점, 격무, 협업
행정법제국 (4개)	행안부(지방행정) 등 담당	심의관	중점, 격무
	인사처 및 행안부(조직) 담당	법제관	격무, 협업
	행안부(지방행정) 등 담당	선임 사무관	중점, 격무
	인사처 및 행안부(조직) 담당	선임 사무관	격무, 협업
경제법제국 (4개)	기재부 및 국세청 등 담당	심의관	격무
	금융위·공정위 담당	법제관	격무
	기재부 및 국세청 등 담당	서기관	격무
	국토부(국토·건설·주택) 담당	서기관	격무

국	부서	선정 직무	선정 사유
사회문화 법제국 (3개)	해수부 담당	법제관	격무
	문체부 및 국유청 담당	사무관	격무
	농림부 및 농진청 등 담당	선임 사무관	격무
법령해석국 (5개)	법령해석총괄과	과장	격무
		총괄 서기관	격무
		민원 총괄 담당자	격무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과장 서기관	중점, 격무 격무
법제지원국 (6개)	법제지원총괄과	과장	중점, 협업
		총괄 서기관	중점, 협업
	자치법제지원과	과장	중점, 협업
		총괄 서기관	중점, 협업
	법제교육과	과장	중점, 협업
		총괄 서기관	중점, 협업
법제조정 정책관 (4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법제관	중점, 협업
		총괄 서기관	중점, 협업
	법제조정법제관실(경제)	법제관	중점, 격무
	법제조정법제관실(행정)	서기관	중점, 격무

자료: 법제처

- 아울러 중요직무 선정 사유 중 “중점”의 근거가 되는 “중점 추진과제”가 매우 광범위하여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³⁾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3. 특수 업 무 분야	사. 중요직 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 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정원의 24퍼센트 이내로 한 정한다)	가) 지급상한액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 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법제처는 중점 추진과제 관련 직무는 국정과제, 2025년 핵심 추진과제, 각종 평가대상 업무 및 기관장 역점 추진사항을 중요직무 선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⁴⁾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정과제나 연도별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보다는 법제처 각 실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연도별 중요직무 선정 법제처 중점 추진과제 >

2023년	2024년	2025년
홍보, 행정법제혁신, 기획총괄, 법제정책, 법령정비, 의원입법 검토·지원, 법령심사, 법령해석, 사전입안지원, 자치법제 지원, 알기쉬운법령만들기, 평가, 정부혁신, 규제법제혁신, 법령검토지원,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교육	홍보, 기획총괄, 법제정책, 법령정비, 미래법제, 의원입법 검토·지원, 법령심사, 법령해석, 사전입안지원, 자치법제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평가, 정부혁신, 규제법제혁신, 법령검토지원,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교육	기획총괄, 법제교류, 법제혁신, 법제정책, 법령정비, 미래법제, 의원입법 검토·지원, 법령심사, 법령해석 , 사전입안지원, 자치법제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평가, 국회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교육

자료: 법제처

- 예를 들어 법제처는 2025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법령해석”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법령해석국(5과 29인)⁵⁾ 모두가 수행하는 업무로, 이 직무의 중요도가 다른 업무에 비해 높다고 판단할 만한 특수한 직무인지 의문이 있음.

4) 법제처, 2025년 법제처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2025. 1.

5) 국장 1인, 법령해석총괄과 9인, 행정법령해석과 5인, 경제법령해석1과 5인, 경제법령해석2과 5인, 사회문화법령해석과 4인, 총 29인

2025년 중요직무 선정 대상 중 “법령해석”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은 행정법령해석과 과장인데, “법령해석”을 수행하는 많은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직무만을 중요직무로 선정한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 이는 다시 중요직무급 선정 절차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면 근거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지킬 필요성으로 이어짐.

- 따라서 법제처는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직무 선정의 근거가 되는 중점 추진과제를 중요직무급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국정과제, 연도별 핵심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직무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1011-2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00)는 법제처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17억 9,4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400만원(0.8%)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633	1,780	1,794	14	0.8
상용임금(110-03)	445	485	533	48	9.9
일용임금(110-04)	9	-	-	-	-
특근매식비(210-05)	207	220	171	△49	△22.3
일.숙직비(210-06)	21	27	27	0	0.0
복리후생비(210-12)	272	334	337	3	0.9
기타운영비(210-16)	162	169	175	6	3.6
직책수행경비(250-02)	421	427	427	0	0.0
특정업무경비(250-03)	10	10	10	0	0.0
고용부담금(320-09)	85	107	114	7	6.5

자료: 법제처

나. 파견검사분 직책수행경비 감액 필요

- 직책수행경비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법제처는 2026년 예산안에 처장 1,844만원, 차장 1,260만원 등 총 90명에 대한 4억 2,668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계상하였음.

< 직책수행경비 편성내역 >

(단위: 천원)

지급대상	산출근거	지급액
[250-02]직책수행경비		426,684
가.처장	1인*1,537,000원*12월=	18,444
나.차장	1인*1,050,000원*12월=	12,600
다.고위공무원(나급 갑)	8인*900,000원*12월=	86,400
라.고위공무원(나급 을)	5인*825,000원*12월=	49,500
마.3급 복수직(갑)	7인*500,000원*12월=	42,000
바.3급 복수직(을)	6인*450,000원*12월=	32,400
사.4급(갑)	11인*350,000원*12월=	46,200
아.4급(을)	22인*300,000원*12월=	79,200
자.4급(기타)	28인*150,000원*12월=	50,400
차.파견검사	1인*795,000원*12월=	9,540

자료: 법제처

□ 이 중 법제처 파견검사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월 79만 5,000원으로 총 954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그러나 202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 시 법무부가 외부기관 파견 보직을 감축하여 법제처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았고,⁶⁾ 법제처는 2025년 10월 현재 다시 검사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파견 검사분 직책수행경비 954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6) 법무부, 2025년 하반기 검사 인사, 2025. 8. 21.

3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는 법제처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와 각 관서의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35억 4,4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900만원(2.6%)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3,117	3,455	3,544	89	2.6
일반수용비	1,499	1,658	1,608	△50	△3.0
공공요금및제세	59	101	106	5	5.0
피복비	-	0.6	0.6	0	0.0
급식비	3	3	4	1	33.3
임차료	176	278	295	17	6.1
유류비	10	15	15	0	0.0
시설장비유지비	78	100	100	0	0.0
일반용역비	103	145	196	51	35.2
국내여비	179	228	219	△9	△3.9
국외업무여비	11	16	15	△1	△6.3
국외교육여비	14	-	38	-	-
관서업무추진비	149	179	180	1	0.6
포상금	-	0.1	0.1	0	0.0
공사비	75	160	185	25	15.6
자산취득비	311	521	560	39	7.5
무형자산	450	50	23	△27	△54.0

자료: 법제처

나. 『법제』 발간을 위한 원고료 예산 감액 필요

-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 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임. 법제처는 이 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대변인실 소관에 편집·인쇄비, 원고료, 안전검토수당(심사료) 등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8,220만원이 편성됨.

< 『법제』 발간 예산 편성내역 >

(단위: 천원)

지급대상	산출근거	지급액
[210-01]일반수용비		82,200
나. 법제 발간		70,400
1) 편집 및 인쇄비	2,800원*3,000부*4회=	33,600
2) DM 대행료	300원*3,000부*4회=	3,600
3) 원고료	50,000원*20면*8편*4회=	32,000
4) 참고문헌 구입비	50,000원*2권*12회=	1,200
라. 법제 편집 및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1,800
5) 편집수당	100,000원*7인*4회=	2,800
6) 연구윤리위원수당	100,000원*10인*1회=	1,000
7) 안전검토수당	50,000원*5인*8편*4회=	8,000
합계		82,200

자료: 법제처

- 2021년 이후 법제 발간을 위한 예산은 상당부분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음. 최근 4년간 예산 대비 집행액을 비교해보면, 2022년 2,046만원(25.3%), 2023년 2,809만원(34.2%), 2024년 2,522만원(30.7%)으로

연평균 약 2,459만원(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제』 발간 예산 집행내역 >

(단위: 천원)

항목		편집 및 인쇄비	DM 대행료*	원고료	참고문헌 구입비	편집수당	연구윤리 위원수당	안전검토 수당	합계
2022	예산	32,280	3,600	32,000	1,200	2,800	1,000	8,000	80,880
	집행	35,524	0	9,300	0	3,600	0	12,000	60,424
	잔액	△3,244	3,600	22,700	1,200	△800	1,000	△4,000	20,456
2023	예산	33,600	3,600	32,000	1,200	2,800	1,000	8,000	82,200
	집행	32,812	0	7,200	0	2,800	2000	9,300	54,112
	잔액	788	3,600	24,800	1,200	0	△1,000	△1,300	28,088
2024	예산	33,600	3,600	32,000	1,200	2,800	1,000	8,000	82,200
	집행	36,080	0	7,200	0	3,200	0	10,500	56,980
	잔액	△2,480	3,600	24,800	1,200	△400	1,000	△2,500	25,220
2025. 10.	예산	33,600	3,600	32,000	1,200	2,800	1,000	8,000	82,200
	집행	32,890	0	6,600	0	2,400	0	9,900	51,790
	잔액	710	3,600	25,400	1,200	400	1,000	△1,900	30,410

주: DM대행료는 '편집 및 인쇄비'에 포함하여 집행

자료: 법제처

□ 이는 주로 원고료를 과다계상하는데 원인이 있음. 원고료는 학술지에 원고가 게재되는 경우 1건에 30만원을 지급(법제처 직원이 제출한 원고는 제외)하는데, 2022년부터 예산에는 학술지에 연간 원고 107편이 게재되는 것을 전제로 매년 3,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원고 게재 건수를 보면 2022년 31건, 2023년 24건, 2024년 26건이며 2025년에는 최대 38건이 게재될 예정으로,⁷⁾ 2025년

기준으로도 원고료 지급액은 960만원을 넘지 못할 예정임. 이는 원고료가 실제 게재 원고수에 비하여 심각하게 과다계상되어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이 학술지는 투고된 원고 전체를 심사하여 심사를 통과한 원고만 게재하므로, 원고 투고 수는 게재된 원고 수보다 많을 수밖에 없음. 법제처는 투고된 원고 1건당 30만원의 심사료(건당 10만원, 심사위원 3명)를 집행하고 있는데, 매년 27편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안건 검토 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면서도 게재된 원고에 지급하는 원고료는 107건이 게재될 것으로 기준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법제처는 법제 발간을 위한 원고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7) 2025년 3월호, 6월호, 9월호까지 28건(이 중 4건은 법제처 직원의 원고로 원고료 지급하지 않음), 12월호 투고 신청 10건(10건 중 심사를 통과하는 건만 게재됨)

4. 법령정보제공(1031-3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령정보제공(1031-300)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안이나 법 제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안의 제·개정 내용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 도모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법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안 만들기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운영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1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대비 1억 1,600만원(△7.5%)이 감액되었음.

【 2025년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법령정보제공	1,613	1,552	1,436	△116	△7.5
법제 및 법령 알리기	846	746	844	98	13.1
어린이·청소년법제관	356	353	357	4	1.1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441	453	236	△217	△47.9

자료: 법제처

나. 입법체험행사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운용 필요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을 대상으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법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토론마당, 법령안의 표현형식과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참여 심사,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모의 법안을 직접 작성해보는 법안 만들기,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는 독서대회, 헌법·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법령퀴즈 골든벨,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 법제관을 격려하기 위한 수료 행사를 개최하는 한마당 등이 있음.

【 입법체험활동의 내용 】

대상	활동명	세부 내용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
	지역아동센터 기본법제교육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법제관 대상으로 기본법 교육 및 생활법령 퀴즈 등 진행
	법 기관 탐방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법제관 대상으로 법 관련 기관 탐방 기회 제공
	참여심사	법제관이 되어 법령안의 표현형식과 내용에 대한 심사 실시
	법안 만들기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모의 법안을 직접 작성하는 활동 실시
	독서대회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감상문 제출
	법령퀴즈 골든벨 예선, 결선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실시
	한마당	한 해 동안의 활동 마무리 및 우수 법제관 격려를 위한 수료 행사
청소년법제관	기본법제교육	헌법, 입법과정, 생활법령 강의 및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법안 만들기 활동 진행
	토론마당	청소년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진행
	규칙 제정·개정 대회	소속 기관 규칙을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다른 청소년법제관과 토론을 통해 직접 제정·개정 실습
	활동보고 대회	법 관련 우수 활동 기관 선정
	독서대회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감상문 제출
	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법제처 법제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료: 법제처

□ 이와 같이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법체험활동의 경우 실제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주요 성과판단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만족도조사를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입법체험활동 만족도조사 결과 】

구분	2024	2025. 9.	구분	2024	2025. 9.
어린이 법제관	• 제16기 한마당: 96.2% • 토론마당: 95% • 참여심사 97% • 법안 만들기: 92.3% • 법령퀴즈 골든벨: 91.3% •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97.5%	• 제17기 한마당: 97.5% • 토론마당: 96% • 참여심사: 97%	청소년 법제관	• 토론마당: 97% • 법령퀴즈 골든벨: 96.1% • 진로탐방 간담회: 91.3%	• 토론마당: 93% • 법령퀴즈 골든벨: 86%

자료: 법제처

- 한편, 2024년 및 2025년의 입법체험활동 만족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마당, 참여심사 등은 96~97%의 높은 만족도 수치를 보여주나, 법령퀴즈 골든벨의 경우 2025년 만족도 수치가 86%에 해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 그런데, 2026년도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등 모든 예산이 2025년도 편성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편성내역 】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일반용역비(210-14) : 140,535천원 가. 어린이 법제관 (107,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4,000천원x12회=48,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30,000천원x1회=30,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사회적 배려계층 초청행사 14,000천원x1회=14,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15,000천원x1회=15,000천원 나. 청소년 법제관 (33,8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900천원x10개교=9,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20,000천원x1회=20,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수료 및 시상식 4,800천원x1회=4,800천원 다. 조정계수 (△265천원) - △265,000원	○ 일반용역비(210-14) : 140,535천원 가. 어린이 법제관 (107,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4,000천원x12회=48,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30,000천원x1회=30,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사회적 배려계층 초청행사 14,000천원x1회=14,000천원 -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15,000천원x1회=15,000천원 나. 청소년 법제관 (33,8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입법체험 활동 및 교육 900천원x10개교=9,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20,000천원x1회=20,000천원 - 청소년법제관 수료 및 시상식 4,800천원x1회=4,800천원 다. 조정계수 (△265천원) - △265,000원

자료: 법제처

□ 따라서, 입법체험활동 만족도조사를 반영하여 수치가 낮게 나오는 입법체험활동의 경우에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법제정비(1032-3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정비 사업(1032-301)은 법제처가 법령의 품질제고 및 문제점 개선,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정비) 규제 정비 등 법제적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법령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를 지원함.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및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

□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10.6%)이 감액된 11억 8,400만원임.

【 2026년도 법제정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제정비	1,236	1,184	1,145	△39	△3.3%
법령정비	437	467	394	△73	△15.6%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291	274	332	58	21.2%
알기 쉬운 법제 구축	507	443	419	△24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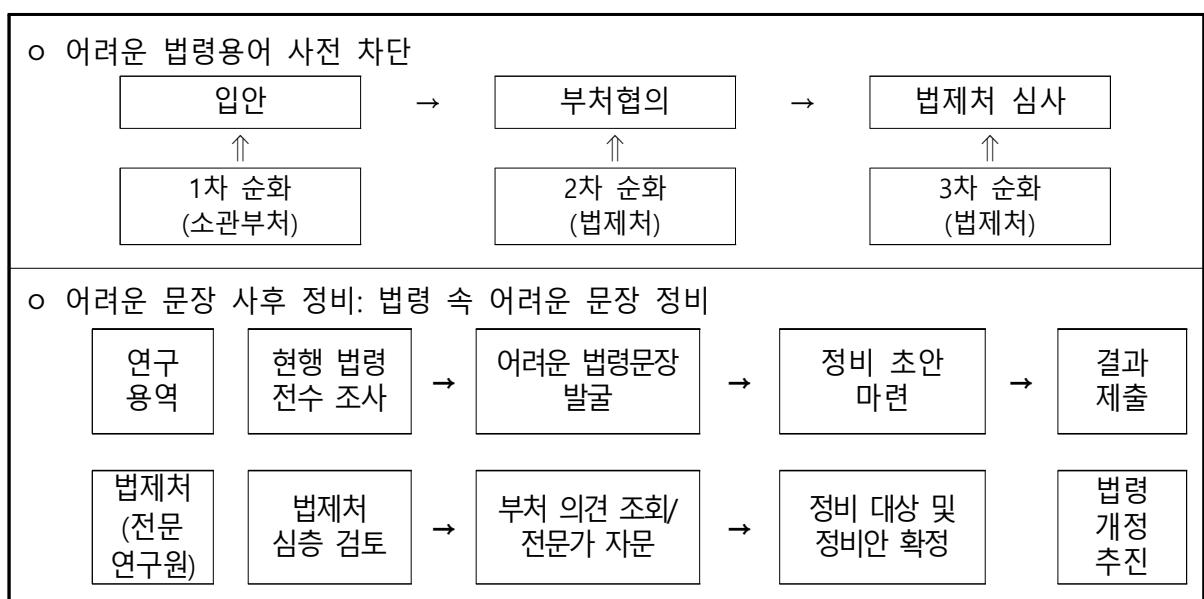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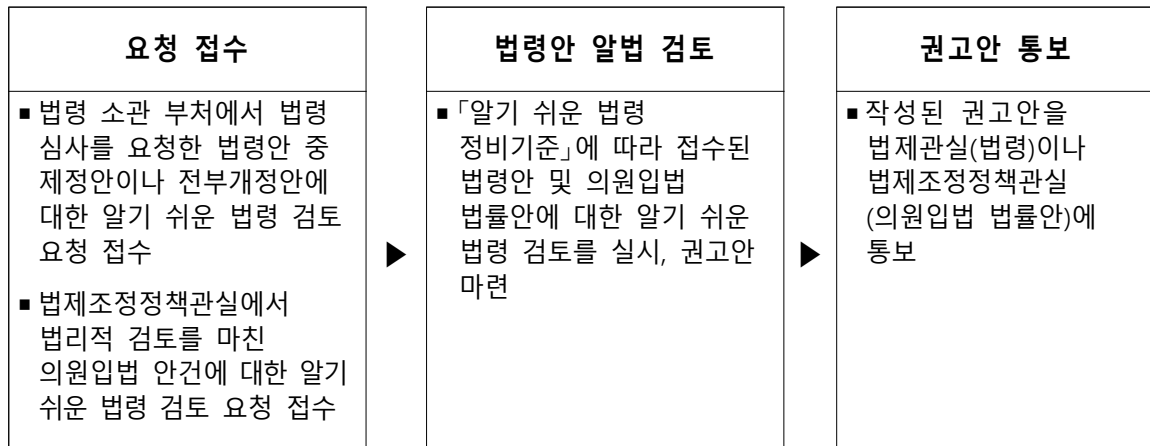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알기 쉬운 법제 구축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전차단 및 사후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 총 4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음.
-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제 구축 내역사업은 ① 입안 및 부처협의 단계에서의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②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사후 정비, ③ 제정·전부개정 법령안 및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의 요청에 따른 의원입법 법률안 상시 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 흐름도 】



○ 법령안 및 의원입법 법률안 상시 검토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개선하여왔음. 그러나 법제처가 2022년 2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⁸⁾ 그동안의 용어 정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는 길고 불명확한 문장과 복잡한 법령 체계 때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법제처는 2023년부터 기존의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로 주안점을 변경하여 법령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2023년 법제처는 ‘문장정비’ 사업을 위해 1억 7,759만 원을 집행하여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1, 2)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도 재산·가족관계 분야, 경제·금융분야

8) 국민 인식조사 결과('22년 2월/1,230명 대상), 79.7%가 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불명확한 문장 45.6%, 복잡한 조문 체계 48.5%라고 응답하였음.

및 약관·계약서 분야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알기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용역 개요 】

구분	용역명	연구기관	계약기간	집행금액
2023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배재대학교 산학 협력단	‘23.4.~’23.11.	5,929만원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1)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23.5.~’23.10.	6,000만원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2)	안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23.4.~’23.10.	5,830만원
2024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재산·가족관계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24.3.~’24.10.	6,800만원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24.3.~’24.10.	6,800만원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연구	(재)한국법령정보원	‘24.2.~’24.11.	4,000만원
2025	사회복지 분야 법령 등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25.4.~’25.10.	3,000만원
	AI를 활용한 법령문장 분석 연구	주식회사마인즈솔루션	‘25.4.~’25.12.	5,670만원
합계				4억 4,029만원

자료: 법제처

- 2023년의 연구용역 3건을 통하여 연구용역을 담당한 기관에서 발굴한 문장 정비 건수는 총 1,976건이었음. 이 중 법제처가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소관 부처에 정비안 초안을 송부한 건수가 533건(27%), 이를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여 선정된 최종 정비안의 건수가 323건(16.3%)임.

이 323건 중 개정이 완료된 건수는 2025년 9월말 현재 39건(1.9%)에 불과함.

【 알기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용역 이후 정비 현황 】

(단위: 문장 수, 2025년 9월말 기준)

연구용역	용역 발굴	부처협의안 (법제처 초안)	최종 정비안 (부처 수용안)	개정 완료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1), (2)	815	333	222	23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1,161	200	101	16
2023년 계	1,976	533 (27%)	323 (16.3%)	39 (1.9%)
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800	168	69	1
재산·가족관계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846	224	142	0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연구	6,942	1,081	482	0
2024년 계	8,588	1,473 (17.2%)	693 (8.1%)	1 (0.0%)

자료: 법제처

- 2024년에 진행한 연구용역 3건 중 경제·금융 분야와 재산·가족관계 분야,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연구 3건의 용역에서는 연구기관에서 8,588건의 정비안을 발굴하였고, 법제처가 선정한 건수는 1473건(17.2%), 이 중 부처가 수용한 최종 정비안 건수는 693건(8.1%)에 불과하고, 정비 실적은 1건에 불과함.
- 2023년과 2024년 연구용역비 집행액만 3억 5,359만원에 달하고, 이

문장 정비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별도로 실시하여 전문가 자문료도 5,240만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결과 중 최종 정비안에 포함되는 건이 채 20%에 미치지 못하며, 2024년(8.1%)에는 2023년(16.3%)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개정 실적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⁹⁾

- 또한 최종 문장정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정비안의 경우 문장 속의 조사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수정만을 하고 있어 본래 조문도 법령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인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정비 활동은 일반 국민이 법령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따라서, 문장정비 사업은 연구용역 이후 문장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정비 실적도 미흡하며, 정비안 자체도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문장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보다는 현재 확정된 정비안의 개정에 보다 집중하고, 향후 문장정비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문장정비의 경우 문장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법령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 용어정비에 비해 보다 신중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는 수치임.

【 문장정비 최종안 예시 】

정비대상	최종 정비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율규약)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규약)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및 시행령	
제6조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6조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제11조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말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말고, 위원은 각 시·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맡는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④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제1항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5조의5제1항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조의5제1항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제5조의5제1항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자료: 법제처

6.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은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을 전자적으로 구축·유지·관리하고,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등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그 밖에 법제처 정보화와 관련한 일반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205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55%인 12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ISP(2024년 수립),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2023년 수립) 및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ISP(2024년 수립) 결과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등이 예산안에 계상되었기 때문임.

【 2026년도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법제업무정보화추진	8,435	8,046	20,517	12,471	155.0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5,041	4,632	7,305	2,673	57.7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B-A)/A
정부입법 지원사업	1,919	1,618	8,898	7,280	449.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30	433	1,967	1,534	354.3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431	459	579	120	26.1
PC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365	526	774	248	47.1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17	99	376	277	279.8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	40	436	396	990.0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32	239	182	△57	△23.8

자료: 법제처

나. 생성형 AI 플랫폼의 정확성 확보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AI)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①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②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④ 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보다 57.7% 증액된 7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 내용	2026년 예산(안)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법령, 판례, 해석례 등)를 추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추진	3,344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용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데이터 및 라이선스 구매	5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아웃 고도화	일반국민 및 정보취약계층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노후화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아웃을 고도화	251
	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관보에 공포되는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법령정보간 연계정보 현행화 등을 관리	1,98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1,723
합 계			7,305

자료: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중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은 기존의 ‘지능형 법령검색(Lawbot)¹⁰⁾’이 법조문만을 찾아주는 기능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일상언어나 문장을 통해 법령 조문, 입법 취지, 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검색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에 따르면 2026년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RAG)을 도입하여 생성형 AI 법령정보

10) <https://www.law.go.kr/LSW/aai/main.do>.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며, 2027년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법령정보를 정리·요약하는 생성형 AI 대국민 서비스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기존 지능형 법령검색(Lawbot) 서비스 화면 】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 Q +

>

▼

▲

▲

■ 검색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

근로기준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근로조건의 명시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00436호, 2025. 2. 21., 일부개정]

서식

제16조(서식) ①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 2019.6.28, 2021.4.5, 2021.11.19> 1. 법 제41 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규약의 내용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금(이하 "조합금"이라 한다)의 조성 ...

【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화면 예시 】

로그아웃

법제처님 반갑습니다!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입니다.

> 최근 기록

채팅

저출생 관련법... 2024.07.08

부동산 임대 관련법... 2024.07.09

페이징 요약생성... 2024.07.10

> 요약 생성

www

> 의견보내기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개선 의견을 보내주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입법배경 및 취지

근로기준법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근무 환경, 임금, 노동 시간 등을 규제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개정 이유
2021.5.18 일부 개정된 노동법 개정안(법률 제1817호)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헌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당하고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를 강화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하고 구제절차 개선(제33조 제4항 신설): 근로계약 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원주목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며, 하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령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99조(사용종결서)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제1항)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배제한다.
1.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1817호, 2022. 1. 11. 일부개정)

행정규칙 해당내용 없습니다.

판례·해석례 등

관련 판례 대법원 2012다200486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합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정사유가 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정사유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

생성형 AI 법령정보

질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https://www.easylaw.go.kr/CSP/EasyLawInfoR.do?csmSeq=1604&easySeq=2264&search_put=%E4%B7%BC%E8%A1%9C%E4%B3%B0%E4%A4%80%E8%B2%95
출처: 생법 카드뉴스

별지·서식 해당내용 없습니다.

자료: 법제처

- 현재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는 챗봇 기능 등에 그치고 있고, 일상적인 대화 문장 등 자연어를 이용한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문제는 LLM(대화형 언어모델)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정보를 생성하는 AI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법령정보의 오류는 국민 실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고, 향후 공적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RAG 시스템 구축 예산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AI 환각 현상을 전부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예산편성 내역 】

구분	공급 단가(원)	수량	공급가(원)
생성형 AI를 위한 법령 LLM 모델 구축	1,656,000,000	1	1,656,000,000
법령정보 정확성 제고 시스템(RAG) 구축	158,000,000	1	158,000,000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	870,000,000	1	870,000,000
생성형 AI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료	660,000,000	1	660,000,000
합 계	3,344,000,000		

자료: 법제처

- 따라서 법제처는 AI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능형 법령검색(Lawbot) 사용자의 질의 입력 히스토리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법령검색을 위한 학습데이터셋¹¹⁾ 구축에 활용하는 한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의 개발 시 법령 조문, 판례번호 등 인용

11) 학습데이터셋(Training Datasets)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제공되는 데이터 모음으로, 정확하고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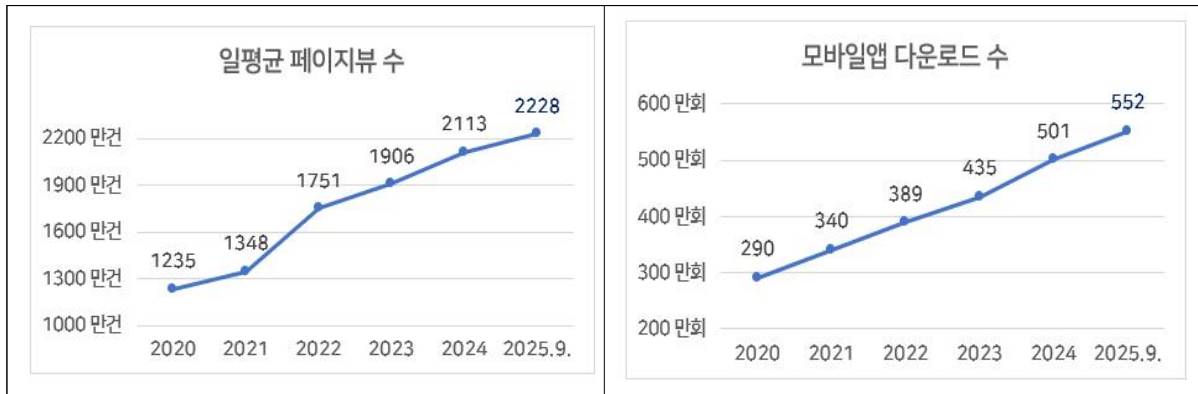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자가 곧바로 해당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예산의 증액 검토 필요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중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는 일반국민 및 정보취약계층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¹²⁾를 고도화하려는 예산으로 2026년도에 예산 2억 5,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판례 및 재결례 등 약 727만 건의 법령데이터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이용자 수 및 제공되는 법령데이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12) 레이어(Layer)는 층(層)을 의미하며, 정보시스템에서는 화면이나 기능을 역할별로 구분해 구성한 계층적 단위를 지칭함.

【 법령검색시스템 이용자 현황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2009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이후 데이터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었으나, 컴퓨팅 이용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화면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제처에 따르면 많은 버튼과 복잡한 메뉴 구성으로 일반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인지하거나 활용하기 어렵고,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음성지원 서비스(2024년 10월), 전자점자 서비스(2025년 4월) 등 소규모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키보드만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에서 법령정보 접근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설문 의견이 있었음.

【 시각장애인·고령층 대상 연도별 설문조사 의견 】

구 분	연 도	주요 의견
시각장애인	2022	① 스크린리더를 통한 법령본문 읽어주기 불편 및 기능안내 미흡

		② 모바일앱 시각장애인 인터페이스 편의성 부족 ③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경우 메뉴이동 불편 등 화면개선 필요
	2023	① 대체텍스트 설명 보완 필요 ② 화면 아이콘 시인성 개선 필요 ③ 메인화면 메뉴 간소화 및 간격 확대 필요
	2024	① 별지서식 등 첨부파일의 경우에도 스크린리더 사용 필요 ② 파일 다운로드 기능 등 각종 버튼을 찾기 쉽도록 개선
고령층	2024	① 법령검색 이용편의성 개선 필요 (검색화면 직관화)

자료: 법제처

- 또한, 법제처는 2025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구성 및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 총 1,089명의 이용자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이용자들이 시급한 개선 영역으로 지목한 부분은 모바일 앱 디자인·기능(45%)과 웹 디자인·기능(41%)으로, 이 두 영역이 전체 개선의견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25년 설문조사 의견 】

분 야		주요 의견
웹	디자인	• 글자 크기나 배치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짐 • 메뉴 위치 재배치를 통해 직관적이고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메뉴 위주로 구성 필요 • 메뉴가 너무 많아 복잡하므로 메뉴 단순화 필요
	기능	• 기능은 다양하나, 각 기능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움
모바일	디자인	• 모바일에서 웹 서비스 이용 시 원활한 웹 환경 지원 필요 • 작은 화면에 버튼이 너무 많아 복잡하여 화면 단순화 필요 • 글자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짐
	기능	•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할 필요

자료: 법제처

□ 이상과 같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령정보센터는 다양한 기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기반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임.

□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버튼과 복잡한 메뉴 구성의 직관화, 반응형 웹 기술의 적용, 뒤로가기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구성 재설계 등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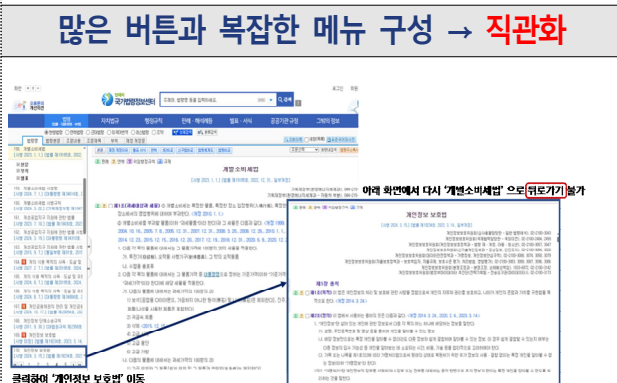
① 현행법령·연혁법령 등 주요 소제목 인지 불편

② 별표서식, 신규법비교 등 주요 기능 인지 불편

고령자의 경우 작고 뾰족한 체크박스 버튼을 확인하기 어려움



많은 버튼과 복잡한 메뉴 구성 → 직관화



아래 화면에서 다시 '개별소제법'으로 뒤로가기 불가

클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이동

모바일 기기 사용 곤란 → 반응형 웹(화면 자동 조절)



법문 본문 열기 위해 [속독 프레임]을 전부 재생해야 함

좌측 프레임 우측 프레임

뒤로가기 제한 → 뒤로가기 지원(이전에 본 법령)

시각장애인이 키보드로 자유로운 화면 이동

13) 2025년 10월 24일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다만,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편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아웃 고도화 예산 2억 5,100만원으로는 PC 웹 및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하여 10억 7,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해당 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라.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의 필요성 검토 및 효과적인 운용 필요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처내업무 행정정보화’의 2025년도 예산은 4억 5,900만원이었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5억 7,9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2026년도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법제업무정보화추진	8,046	20,517	12,471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4,632	7,305	2,673
정부입법 지원사업	1,618	8,898	7,28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433	1,967	1,543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459	579	120
PC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526	774	248
세계법제정보서비스	99	376	277

구 분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40	436	396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39	182	△57

자료: 법제처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 컨설팅 인력 2명의 5개월간 인건비가 약 9,800만원임.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예산 산출내역 】

구 분	업 무 활 동	인력등급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MM)	월평균임금 (20.9일)	금액(원)
직접 인건비 ①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총괄 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1	5	9,706,020	48,530,100
	개인정보 운영 실태 점검 / 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1	5	9,857,100	49,285,500
	소 계					97,815,600
제경비②	직접인건비의 10%					9,781,560
기술료③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4% ※					1,506,360
총 계(부가가치세 별도)④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109,103,520
부가가치세⑤		(④) × 10%				10,910,352
합		계(④+⑤) ※ 100단위 절삭				120,013,000

자료: 법제처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파기 관련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미흡 사항의 진단·조치를 지원하는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법제처에서 운영 중인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로 구성됨.

- 2025년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제처의 경우에 주민사무를 담당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만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례 】

기관명	컨설팅 사례	세부 내용	예산액
행정안전부	2025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컨설팅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법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성 확보조치 지원	136백만원
우주항공청	2025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우주항공청의 각종 관련 규정(법률, 지침, 내부관리 계획 등) 준수 여부 점검, 컨설팅 등을 통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역량 강화	200백만원

자료: 법제처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¹⁴⁾,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시스템, 법제교육시스템, 어린이법제처시스템을 포함하여 추후 추가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행정 신뢰와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14) 법제처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가입자 수는 12만 949명임.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중 정부입법지원센터(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법령입안·심사 및 법령해석 업무),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 및 법령정비 관련 국민 의견제시 창구), 법령안 편집기(법령안 입안·심사 및 대국민 활용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 56억 3,600만원이 동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6년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예산 산출내역 】

기능점수	기능점수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천원)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보안성	
4610	605,784	1.153	1.12	1.09	1.06	1.06	4,416,764
개발원가 계							4,416,764
이윤						10%	441,6761
소계(개발원가 + 이윤)							4,858,441
부가세						10%	485,844
감리비							291,900
합 계							5,636,100

- 따라서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정에서 정부입법 통합플랫폼 구축 이후의 개인정보 관리방안도 점검하는 등 신규편성된 개인정보 컨설팅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제처 내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 (법제교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함.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함.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 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

□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9억 8,100만원(54.4%) 증액된 2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태안 법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관리비 예산의 계상 등임.

【 2026년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294	1,802	2,783	981	54.4
법제교육	1,052	1,538	2,515	977	63.5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166	130	130	-	-
청년인턴 제도 운영	77	134	138	4	3.0

자료: 법제처

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진행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제교육 사업에는 25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법제교육 사업에는 법제교육과정 운영, 법제교육센터 운영,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등이 있음.
- 이 중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는 외국의 법제를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담당자의 법제실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매년 약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연도별 단기해외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연도	예산편성액	집행액
2021*	46,041	-
2022	42,977	39,408

2023	43,623	43,423
2024**	43,633	43,720
2025**	43,713	44,490
2026	43,713	-

* 2021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연수 취소로 집행내역 없음

** 통역비 예산 부족으로 일반수용비(210-01) 내에서 자체전용

자료: 법제처

- 법제처에 따르면, 단기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 정책현안 파악 및 법제 업무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법제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정책 분야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정책, 법령 등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방분권 및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이에 2024년 6월 2일부터 8일까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영국 연수에서는 런던 펀더스(London Funders), 버밍엄 도시지역 경제개발연구소, 버밍엄대학교 로스쿨, 케임브리지대학교 등의 기관방문이 있었는데,
- 법제처의 “2024년도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연수에서 현장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국립미술관(The National Gallery) 및 윈저성(Windsor Castle) 방문이 이루어졌음.¹⁵⁾

15) 법제처, 2024년도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24.7. 참고.

□ 해당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연수결과 및 시사점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영국의 장점 참고 필요성”과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교육기관, 시민단체 간 협력 방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¹⁶⁾ 대영박물관 등의 방문과 연수결과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2025년 5월 결재된 “2025년도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실시계획”을 보면, 방문예정기관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뉴로(Nuro), 스탠퍼드대학교, 몰로코(Moloco), LA 카운티 교육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인공지능센터(USC Center for AI in Society)였는데,

2025년 6월에 있었던 단기해외연수에서 LA 카운티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실리콘밸리 혁신센터(Silicon Valley Innovation Center), AI 안전센터(Center for AI Safety), 족스(Zoox)를 방문하는 등¹⁷⁾ 실제 방문기관과 차이를 보였음.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방문 도시의 시위로 방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문이 취소되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방문예정기관 6곳 중 5곳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16) 위 보고서, pp.84~87.

17) 법제처, 2025년도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25.7. 참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최근의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를 살펴보면, 출장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이 포함되거나 기존 실시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있으므로 단기해외연수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그런데도 2025년 한 해에만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38명과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11명¹⁸⁾이 해외연수에 참가하였는바,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를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18) 법제업무담당자 연수비용은 각 담당자의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이들을 인솔하여 단기해외연수를 진행하는 법제처 담당자 8명의 연수 소요비용임.

8.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는 해외 법제기관과의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이 있음.

- (외국법제기관교류) 법제처와 해외 법제기관 간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선진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미래 법제 쟁점에 공동대응하고 아시아 각국의 법제 발전을 위해 아시아 법제기관 간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다자 협력체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운영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전략을 도출함.

□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억 8,700만원(77.0%) 증액된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 편성임.

【 2026년도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외국법제기관교류	280	243	430	187	77.0
외국법제기관교류	166	126	313	187	148.4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114	117	117	-	-

자료: 법제처

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여국 확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증액된 예산 1억 8,700만원의 대부분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운영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운영 관련 경비 1억 7,700만원 중 5,700만 원은 협의체 ‘회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이고, 1억 2,000만 원은 협의체 ‘세미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임.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운영 관련 경비 예산 】

구 분	산출 내역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회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	- 기관장급 및 고위급 회의: 28,500천원 * 2회 = 57,000천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세미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	- 온라인 세미나: 5,000천원 * 3회 = 15,000천원 - 현지 세미나: 105,000천원 * 1회 = 105,000천원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조정위원회(고위급) 및 총회(기관장급) 개최를 통해 아시아 공통 법제 현안 연구 및 법제 분야의 국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상시적·안정적 법제교류를 추진하며,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제 행정, 법령 정비 및 법령정보 등 분야별로 법제 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상호 법제발전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① 미래 법제쟁점 공동연구, ② 법제행정 협력, ③ 법령정보 협력, ④ 법령 정비 경험 공유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가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태국·캄보디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해당 국가들과 2024년 11월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이후 법제처에 따르면 2025년 9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이 협의체 참여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런데,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은 협의체 참여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바,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각각 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질서 및 아시아 대외관계를 주도하는 국가이므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범규범을 참고하고 법제 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범제처는 중국, 일본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중국과 일본 법제 전문가를 초청했으며, 중국, 일본과의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아시아 지역 법제 협력 필요성을 설득하고, 회원국으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런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석국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치중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은 최근 5년간 각각 1번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주제 및 참석국 】

회차	연도	주제	참석국
제12회	2024	AI와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제11회	2023	법제로 하나 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 방안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일본, 라오스
제10회	2022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 필리핀
제9회	2021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제8회	2020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

자료: 범제처

- 따라서 법제처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하여 협의체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세부사업-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목)	2022년 (추경)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일반회계(총 액)	42,953	42,953	40,672	43,728	43,728	42,622	45,418	45,418	44,290	45,733	60,336
① 인건비 (직접수행, 1001-100)	22,109	22,109	20,771	22,142	22,077	21,734	22,612	22,764	22,736	23,780	24,948
◦인건비(110)	22,109	22,109	20,771	22,142	22,077	21,734	22,612	22,764	22,736	23,780	24,948
② 기본경비 (직접수행, 1011)	4,100	4,100	3,671	4,394	4,459	4,234	5,032	4,972	4,750	5,235	5,338
◦인건비(110)	506	506	466	518	583	487	515	455	453	485	533
◦운영비(210)	2,202	2,202	2,030	2,520	2,496	2,377	2,779	2,765	2,591	3,051	3,033
◦여 비(220)	168	168	124	166	190	185	202	216	203	244	272
◦업무추진비(240)	130	130	130	142	142	141	149	149	149	179	180
◦직무수행경비(250)	410	410	410	426	426	426	437	437	432	437	437
◦보전금(310)	0.1	0.1	-	0.1	0.1	-	0.1	0.1	-	0.1	0.1
◦민간이전(320)	97	97	74	102	102	102	108	108	85	107	114
◦건설비(420)	55	55	55	251	251	251	75	75	75	160	185
◦유형자산(430)	132	132	132	269	269	265	315	315	311	521	560
◦무형자산(440)	400	400	250	-	-	-	450	450	450	50	23
③ 법령정보제공 (직접수행, 1031-300)	2,142	2,142	2,086	1,950	1,959	1,890	1,718	1,716	1,643	1,552	1,436
◦인건비(110)	119	119	116	123	131	130	135	133	132	139	155
◦운영비(210)	1,386	1,386	1,366	1,755	1,755	1,688	1,507	1,507	1,438	1,336	1,203
◦여 비(220)	29	29	15	30	30	30	30	30	29	30	29
◦업무추진비(240)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18
◦연구용역비(260)	568	568	555	-	-	-	-	-	-	-	-
◦민간이전(320)	22	22	16	23	23	23	26	26	24	27	31
④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직접수행, 1031-301)	856	856	796	1,116	1,116	1,085	1,662	1,655	1,610	1,682	1,616
◦인건비(110)	68	68	39	35	35	34	37	30	29	38	42
◦운영비(210)	19	19	18	18	18	18	128	128	122	116	66
◦여 비(220)	7	7	4	7	7	6	7	7	7	7	7
◦업무추진비(240)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연구용역비(260)	28	28	25	69	69	64	40	40	39	70	70
◦민간이전(320)	721	721	697	974	974	950	1,438	1,438	1,401	1,438	1,418

구 분 (세부사업, 목)	2022년 (추경)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액
⑤ 찾가쉬운생활법령 정보서비스 (직접수행 1031-302)	1,049	1,049	1,020	1,051	1,051	1,022	1,328	1,328	1,287	1,362	1,474
◦인건비(110)	28	28	28	29	29	28	29	29	28	30	33
◦운영비(210)	31	31	31	32	32	30	29	29	21	17	17
◦여 비(220)	1	1	0.5	1	1	1	1	1	1	1	1
◦업무추진비(24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민간이전(320)	979	979	951	979	979	953	1,259	1,259	1,227	1,304	1,413
⑥ 법령심사지원 (직접수행, 1032-300)	410	410	367	381	381	354	335	307	286	311	296
◦인건비(110)	95	95	82	97	97	93	100	72	71	103	113
◦운영비(210)	174	174	155	178	178	158	129	129	114	110	83
◦여 비(220)	17	17	16	18	18	15	18	18	13	9	9
◦업무추진비(240)	44	44	44	46	46	46	46	46	46	46	46
◦연구용역비(260)	40	40	36	-	-	-	-	-	-	-	-
◦보전금(310)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민간이전(320)	18	18	12	19	19	19	20	20	20	20	22
⑦ 법제정비 (직접수행, 1032-301)	1,493	1,493	1,426	1,307	1,298	1,211	1,324	1,283	1,236	1,184	1,145
◦인건비(110)	319	319	288	328	319	259	333	292	290	344	377
◦운영비(210)	528	528	518	407	407	397	342	342	328	322	324
◦여 비(220)	37	37	28	39	39	37	39	39	39	32	30
◦업무추진비(240)	37	37	36	39	39	39	39	39	39	39	38
◦연구용역비(260)	501	501	500	421	421	407	496	496	466	371	292
◦보전금(310)	9	9	9	9	9	9	9	9	9	9	9
◦민간이전(320)	62	62	47	64	64	64	65	65	65	67	75
⑧ 행정법제 혁신 (직접수행, 1032-302)	459	459	430	730	730	684	747	747	669	486	303
◦운영비(210)	103	103	103	108	108	106	105	105	99	64	64
◦여 비(220)	8	8	8	8	8	8	8	8	8	8	8
◦업무추진비(240)	4	4	4	4	4	4	4	4	4	4	4
◦연구용역비(260)	344	344	315	610	610	566	630	630	558	410	227

구 분 (세부사업, 목)	2022년 (추경)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안
⑨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직접수행, 1033-500)	8,801	8,801	8,647	8,871	8,871	8,687	8,744	8,741	8,435	8,046	20,517
◦인건비(110)	83	83	82	85	85	83	87	84	83	90	99
◦운영비(210)	4,067	4,067	4,006	3,742	3,742	3,632	4,081	4,081	3,813	4,660	5,522
◦여 비(220)	5	5	5	4	4	4	4	4	4	4	4
◦업무추진비(240)	26	26	26	24	24	24	24	24	24	24	24
◦연구용역비(260)	2,322	2,322	2,274	2,734	2,734	2,705	2,030	2,030	2,024	701	10,674
◦민간이전(320)	1,729	1,729	1,703	1,730	1,730	1,711	1,978	1,978	1,950	2,062	2,001
◦유형자산(430)	569	569	551	552	552	528	541	541	538	506	2,191
⑩ 법제교육 및 법제 전문인력육성 (직접수행, 1034-300)	1,182	1,182	1,122	1,470	1,470	1,412	1,555	1,545	1,294	1,802	2,783
◦인건비(110)	56	56	55	58	58	57	126	117	115	173	183
◦운영비(210)	760	760	749	781	781	758	1,040	1,040	798	1,101	2,120
◦여비(220)	126	126	91	135	135	132	139	139	136	142	172
◦업무추진비(240)	39	39	39	41	41	41	41	41	41	41	41
◦연구용역비(260)	190	190	178	414	414	386	190	190	185	190	190
◦민간이전(320)	11	11	10	12	12	12	19	19	19	24	26
◦건설비(420)	-	-	-	-	-	-	-	-	-	100	50
◦유형자산(430)	-	-	-	29	29	26	-	-	-	30	-
⑪ 외국법제기관교류 (직접수행, 1034-301)	278	278	262	243	243	234	293	293	280	243	430
◦운영비(210)	154	154	145	130	130	128	130	130	127	130	307
◦여 비(220)	61	61	59	53	53	51	53	53	53	53	53
◦업무추진비(240)	13	13	13	10	10	10	10	10	10	10	10
◦연구용역비(260)	50	50	45	50	50	45	100	100	90	50	60
⑫ 법제정책연구개발 (직접수행, 1035-300)	74	74	74	74	74	74	68	68	64	50	50
◦연구용역비(260)	74	74	74	74	74	74	68	68	64	50	50

참고자료 2

2025년도 주요사업 세출예산 집행 현황

(2025. 9,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법제정보 서비스	법령정보제공	소 계		1,552,000	1,150,677	74.1
		110	인건비	139,388	100,785	72.3
		210	운영비	1,335,767	1,000,748	74.9
		220	여비	30,305	20,671	68.2
		240	업무추진비	19,290	15,141	78.5
		320	민간이전	27,250	13,333	48.9
	세계법제 정보서비스	소 계		1,682,000	1,305,224	77.6
		110	인건비	38,203	26,579	69.6
		210	운영비	115,966	89,776	77.4
		220	여비	6,633	6,633	100.0
		240	업무추진비	12,730	10,200	80.1
		260	연구용역비	70,000	59,420	84.9
		320	민간이전	1,438,468	1,112,616	77.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소 계		1,362,000	1,299,168	95.4
		110	인건비	29,943	21,030	70.2
		210	운영비	16,909	8,305	49.1
		220	여비	1,154	866	75.0
		240	업무추진비	9,729	7,162	73.6
		320	민간이전	1,304,265	1,261,805	96.7
정부입법 총괄관리	법령심사지원	소 계		311,000	182,563	58.7
		110	인건비	103,250	59,736	57.9
		210	운영비	109,891	43,753	39.8
		220	여비	9,407	7,425	78.9
		240	업무추진비	46,266	40,266	87.0
		310	보전금	22,000	22,000	100.0
		320	민간이전	20,186	9,383	46.5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법제정비	소 계		1,184,000	811,091	68.5
		110	인건비	343,823	231,966	67.5
		210	운영비	322,069	185,329	57.5
		220	여비	31,644	12,000	37.9
		240	업무추진비	39,247	35,550	90.6
		260	연구용역비	371,000	299,290	80.7
		310	보전금	9,000	0	0.0
		320	민간이전	67,217	46,956	69.9
	행정법제 혁신	소 계		486,000	404,137	83.2
		210	운영비	64,341	58,907	91.6
		220	여비	7,601	7,601	100.0
		240	업무추진비	4,058	4,058	100.0
		260	연구용역비	410,000	333,571	81.4
법제업무 정보화 지원	법제업무 정보화추진 (정보화)	소 계		8,046,000	7,231,462	89.9
		110	인건비	89,828	63,432	70.6
		210	운영비	4,659,868	4,273,464	91.7
		220	여비	4,000	3,000	75.0
		240	업무추진비	23,707	17,449	73.6
		260	연구용역비	701,035	552,620	78.8
		320	민간이전	2,061,562	1,819,153	88.2
		430	유형자산	506,000	502,345	99.3
법제 전문성 향상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소 계		1,802,000	1,188,740	66.0
		110	인건비	173,084	128,127	74.0
		210	운영비	1,101,111	646,118	58.7
		220	여비	142,133	120,600	84.9
		240	업무추진비	41,264	36,564	88.6
		260	연구용역비	190,000	162,214	85.4
		320	민간이전	24,408	12,097	49.6
		420	건설비	100,000	70,697	70.7
		430	유형자산	30,000	12,323	41.1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외국법제 기관교류	소 계		243,000	205,822	84.7
		210	운영비	129,692	117,349	90.5
		220	여비	53,119	42,953	80.9
		240	업무추진비	10,189	5,000	49.1
		260	연구용역비	50,000	40,520	81.0
정책연구 개발	법제정책 연구개발	소 계		50,000	41,130	82.3
		260	연구용역비	50,000	41,130	82.3